



인도, 영양성분 표기 바람 스마트 초이스 프로그램 시행

최근 인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와 관심이 고조돼 평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가지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웰빙 개념이 확산되면서 건강식품 및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인도 식음료업체들은 제품 포장에 영양성분표 라벨 표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영양표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영양성분과 함량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업체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인도에 진출해 있는 유니레버, 켈로그, 코카콜라, 펩시, 콘아그라 등의 세계적인 식품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스마트 초이스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기존에 함유돼 있던 지방, 콜레스테롤, 설탕, 소금 등의 함량을 줄여 새롭게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 말로 예상되는 통합식품법 시행과 더불어 식품 포장에 영양성분 의무화, 기능성 식품에 대한 과학적 패널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맞춰 인도 식품업체들은 현 시장 트렌드에 영양성분표 표기를 모든 제품포장으로 확대하고 기능성 식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양성분 표시를 가장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도 업체는 '힌두스탄 유니

레버(HUL)로 다국적 기업인 유니레버의 자회사이며 인도의 대표적인 소비재 업체다.

HUL은 인도 식료품시장에 'Healthy Choices' 로고를 처음으로 도입한 업체로, 이미 자사 식음료 브랜드인 키산(Kissan), 노르(Knorr), 안나푸르나(Annapurna) 등의 주력 제품 포장 앞면에 'Smart Choice'가 찍힌 로고를 붙이기 시작했다.

또 로고 도입과 함께 HUL의 자사 스프 브랜드인 Knorr는 방부제 사용을 중지하고 나트륨 함량을 7~35% 줄인 제품을 재출시했다. HUL의 한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건강에 이로운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Healthy Choice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식음료품에 들어가는 지방, 소금, 설탕 등의 함유량을 감소했으며 현재 HUL 제품의 85%가 이 프로그램에 적격하다"고 전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인 펩시는 감자칩 '프리도레이(Frito-Lay)' 등 스낵류에 스마트 로고 부착과 'good for you, better for you and treat for you'라는 문구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한편 '초이스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2003년 Unilever, Campina와 Friesland Foods이 설립한 Choice International Foundation에 의해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과학자, 공중보건, 식품산업, 건강관련기관에 종사하는 관계자 그룹이 모여 개발했다.

Smart Choice 라벨이 식품포장에 표기되기 위해선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영양정보에 부합해야만 하며 지방, 저콜레스테롤, 설탕, 소금함량

이 적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A, C, E와 섬유질 등 높은 영양소가 들어 있어야 한다.

EU, 탄소세 도입 가능성 검토 역외 수입제품 적용 의견 엇갈려

Maud Olofsson 스웨덴 에너지장관은 7월 말 스웨덴 Are에서 열린 비공식 EU 환경·에너지 장관 이사회에서 "스웨덴은 탄소세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다.

Andreas Carlgren 스웨덴 환경장관도 탄소세는 기후변화문제와 동시에 EU 회원국들이 당면한 심각한 국가 재정적자문제와 동시에 관련된 조치라면서 그러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장관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교두보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올해 말 전(스웨덴이 EU의 장국을 맡고 있는 기간을 의미)에 그러한 방향의 안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했다.

스웨덴이 생각하는 탄소세는 에너지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변화를 유발시키기 위해 화석에너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알려졌다.

탄소세 도입을 지지하는 측에 따르면 탄소세는 '오염자 지불' 원칙을 반영한 조치로 화석연료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이는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태도를 의미)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생산비를 올리려는 수단이다. 즉 오염 제품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기업에 벌과금을 부과함으로써 태도를 바꾸게 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렇게 탄소세로 거둬들인 수입으로 특수기금을 마련해 녹색기술개발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이미 1990년에 조치를 마련해 실시, 스웨덴에 따르면 이 조치로 CO₂ 배출량을 20% 줄일 수 있었다.

프랑스도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도입을 준비 중으로 사실 프랑스는 현재까지 EU 회원국 중 탄소세 도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유일한 EU 회원국이다.

내국세로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들은 탄소세를 부과하는 대신 다른 세금(근로소득, 소득세 또는 환경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수표 형식의 보너스 부여)을 줄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12월 EU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2013~20년 EU 배출권 거래제도를 강화한 수정에 합의한 바 있다.

수정된 제도에 따르면 예를 들어, 전력 생산업체들은 2020년까지 자신들의 CO₂ 배출권을 1백%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시멘트·철강·알루미늄·화학 산업과 같은 중공업 중사기업들은 엄격한 배출권 거래제도가 기업의 비용부담을 크게 늘려 결국 공장을 역외로 이전시키게 함으로써 환경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한다고 전했다.

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UN기후변화회의(코펜하겐회의라고도 불림)에서는 2012년에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국제협약 체결을 논의하는 것으로 UN기후변화협약(UNFCCC) 체결국들이 참여하게 되며, 스웨덴은 EU의 2020년 배출량을 당초의 20%가 아닌 30% 감축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까지 프랑스만이 역외 신흥경제권에 대항해 유럽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경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유일한 EU 회원국이다. 프랑스는 지난 2008년에 배출권 거래제도를 수정하는 자리에서 이런 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프랑스와 미국이 논의하는 탄소세 도입에 대해 그린무역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상태이다.

EU 회원국 사이에서도 설령 코펜하겐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도 역외산 수입제품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안에는 반대의견이 다수인 상황이어서 설령 EU 차원의 탄소세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역외 수입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탄소세 도입안을 제출하겠다는 현 의장국인 스웨덴의 Maud Olofsson 에너지장관과 Andreas Cargren 환경장관도 이구동성으로 역외산 수입제품에 대해 보호주의는 피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역외국산에 대한 탄소세 부과 협박은 12월의 코펜하겐 협상의 진전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Matthias Machnig 독일 환경차관도 탄소세 부과는 “제국주의적인 환경조치로 인식될 것”이라며, “그러한 조치보다 오히려 세계 탄소시장 창설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스웨덴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올 12월의 코펜하겐회의와 별도로 EU 집행위

는 12월 31일까지 탄소 누수(배출권 거래제도로 인해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공장을 단순히 역외국으로 이전하는 현상을 의미)가 예상되는 산업분야 리스트를 작성한 후 2011년에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출할 예정이다.

칠레, 2011년 비닐봉투 사용 금지법안 추진 환경부, 본격 규제 움직임

칠레 환경부에 따르면 칠레 내에서 소비되는 비닐봉투는 월 2억5천만개, 연간 소비량 30억개로 추산하고 있다.

주로 유통, 소매점에서 사용되는 비닐봉투는 대부분 폐기처분되고, 특히 주요 휴양지와 관광명소 등에 폐기된 비닐봉투로 인해 자연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칠레 정부는 2008년부터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Mas Ambiente y Menos Bolsa”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및 종이봉투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올해 칠레 환경부는 전국의 유통업체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생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이미 하원의 승인을 얻은 상황인 것으로 발표했다.

Roberto Sepulveda 칠레 하원 환경위원회 의장은 올 연말 이 법안이 상원의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며 국회는 물론 칠레 플라스틱협회 또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scobar 플라스틱협회 회장은 칠레 플라스틱산업의 미래는 얼마나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밝히면서 회원기업들의 친환경 제품 생산을 독려했다.

아직 이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원의 검토 및 최종 통과가 남아있으나 법안이 발효될 경우 2011년 이후 칠레 자연분해봉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칠레 내 자연분해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유통체인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 자연분해까지 2백년 이상 소요되는 비닐봉투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체수요 발생 및 친환경제품에 대한 관심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무공해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 새로운 포장기술로 업계 선두 역할 필요 플라스틱류 10% 증가

독일 포장산업협회에 따르면 독일 포장산업은 매년 꾸준한 호조세를 나타내며, 2008년 내수 시장의 호황으로 독일 포장산업의 총 생산액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2백76억 유로를 기록했다.

재료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플라스틱류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 종이 및 판지류는 6% 증가한 반면 유리류는 0.5% 감소했다.

포장 및 용기 재료별 구성비로는 PE 포장지를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이 4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이 및 판지 제품은 32.2%, 금속제품(알루미늄 등) 18.5%, 유리제품은 5.8% 순이다.



[표 1] 독일 포장 재료별 생산현황

재 료	2008년(천톤)	08/07 증감률	2008년(Mrd.유로)	08/07 증감률
플라스틱	3,807	+8.5	12	+10
종이 및 판지	8,272	+6.8	8.9	+6.2
유리	3,888	-0.5	1.6	+4.7
금속	1,652	+5.6	5.1	+11
합계	17,616	+5.4	27.3	+8.7

※ 자료원 : 독일포장산업협회

[표 2] 독일 PE 필름의 재료별 매출액

재 료	생산규모(천톤)		매출액(백만유로)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LDPE	750	785	1,527	1,638
HDPE	185	201	431	491
PP	291	292	687	734
PS	160	179	302	359
PVC hard	278	278	611	679
PVC soft	144	154	567	640
PET	73	83	213	239
PA	29	37	112	147
PC	18	20	101	104
다층foil	517	555	1,516	1,678
기타	120	106	326	326
합계	2,568	2,690	6,393	7,035

※ 자료원 : 독일플라스틱포장협회

독일 포장용 PE 필름은 식품, 의약품, 생활잡화, 가전제품, 건축자재, 가구 등 사용처가 매우 광범위하며, 2008년 기준 독일 PE 포장산업 규모는 연 매출액 1백30억 유로에 달하고 관련 종사자 수는 6명 규모이다.

독일의 PE 필름 중 LDPE 필름이 전체 생산량 중 35% 이상에 달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다층 folie, PP, PVC hard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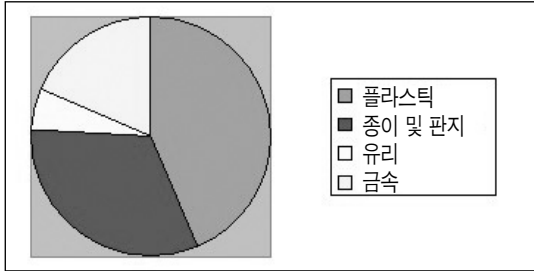
이 제품의 對 독일 수입국은 EU 역내국 수입

이 70% 이상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근거리에 위치한 EU 역내권 국가들을 선호하는 것은 구매담당자와 빠른 의사소통, 제품 생산 및 설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AS, 물류비용 절약 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핫 스템핑포일 전문생산업체들은 50년 이상의 자체 설계 및 제작 인력 확보 등 기초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체 기술을 발전시킨 고품

[그림 1] 포장용기 재료별 시장점유율



※ 자료원 : 독일플라스틱포장협회

질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독일 핫 스탬핑포일 제품의 기술능력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높은 편이므로 독일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은 높으면서 제품에 대한 성능 및 효율성 등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고 독일 바이어와의 적극 접촉을 통한 마케팅을 전개할 경우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제지 수입 일시적 급증 정부, 제지 수입관세 인상

올 2월 베트남 국내의 제지 수요 감소에 따라 재고량이 10만톤을 넘어섰다.

재정부에서 제지 수입관세(HS코드 4801, 4802 일부 항목)를 인상했으며 WTO 가입국가 적용(MFN) 수입관세를 29%로 인상(기존 20~25%)했다.

베트남의 신문, 제본, 필기용 제지수입 금액 중 아세안국가에서 수입은 80%에 이르고 있는데(이 중 CEPT 우대혜택 40%, MFN 관세

적용은 60%로 추정) 이에 산업무역부에서 아세안 국가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건의안을 제안했다.

올 상반기 베트남의 제지 수입량은 45만7천톤 3억3천2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2% 수량과 18.8% 금액이 감소했다. 올 5월, 제지 수입제품 가격이 국내생산 제품 가격보다 낮아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 39% 수량과 39.7% 금액이 증가했다.

올 6월의 제지 수입량은 9만8백20톤, 6천6백80만 달러로 전월 대비 수량과 금액에서 각각 12.23% 수량과 11.08% 금액이 감소했으며 전년동기 대비 1백98.8%로 수량은 크게 증가했으나, 금액은 0.4% 소폭 감소했다.

올해 6월 주요 국가 제지 수출동향은 전월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량이 26.85% 감소했으며 그 외 태국 20.01%, 대만 8.36%, 한국 8.9%로 다소 감소했다.

2008년 동기 대비 6월의 주요 국가의 수출은 크게 증가했으며 한국 1백3.34%, 필리핀 1백70% 수량이 증가했다.

상반기 대 베트남 제지 최대 수출국은 인도네시아로 11만5천5백톤 7천9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9.6% 수량과 5.62% 금액이 증가했다.

한국에서의 제지수입은 4만6천7백60톤, 2천5백73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량과 금액에서 각각 37.7%, 8.2% 증가했으며 수입금액 순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